

1주택자 보유세·건보료 작년 수준 동결...고령자 납부 유예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장관회의 재산·종부세 과표 작년 공시가 적용 주택 93% 재산세 작년보다 낮아져 국회 법 개정 과정 더 낮아질 수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국회의 법 개정 논의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며,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인 내용 등을 담은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부담 완화방안은 이날 발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17.22% 상승)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급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마련됐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는 이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올해 6월1일 기준)에 한해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만 올해 공시가격을 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 가격이므로 작년 공시가격을 쓰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시키는 효과를 낸다.

재산세의 경우 작년보다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가격 구간별로 세율을 0.05%포인트 감면) 효과까지 고려하면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계층(작년 공시가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아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종부세 역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 된다. 올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은 14만5000명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된다.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했을 경우보다 6만9000명이 줄어든다.

1세대 1주택자 대상 과세액은 2417억원으로 작년 2295억원보다 소폭 증가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했을 때(4162억원)보다 1745억원 줄어든다.

현재 다주택자라도 기존일인 6월 1까지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작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부분은 국회 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과정에서 변동 소지가 있다.

정부는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국회가 2021년 공시가 대신 공시가 급등 이전인 2020년 공시가격을 채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시가격이 지난해가 아닌 2020년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라는 움직임이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상태는 아니다.

정부 역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국회와 계속 소통하면서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납세 여력이 부족한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는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재산세 과표가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동결되는 효과를 낸다. 재산공제액이 기준 500만-1350만원에서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1세대 1주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감소 또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과표동결 시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첫 회동이 표류하는 가운데, 감사위원 인선을 둘러싼 대립이 협상 공전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집무실 이전 문제를 두고 양측의 정면충돌 양상이 빚어지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전망은 한층 어두워진 형국이다. 경북공 너머로 청와대가 보인다. /연합뉴스

피부양자 탈락자도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령은 재산세 과표금액 기준 3억6000만원(공시가 6억원) 초과 9억원(공시가격 15억원) 이하이면 서 연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과표가 9억을 초과할 경우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있다. 즉 건보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공시가격과 연동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생계급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 등 복지제도 역시 올해 수급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오광복 기자 kroh@kwangju.co.kr

한은총재 임명 “의견 들었다” “협의 없었다” 문 대통령·윤 당선인 더 꼬인 인사권 갈등

청와대 회동 손짓에尹측 냉랭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 측과의 관계가 어떻게 풀릴 것인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한은 총재 인사와 관련,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반박, 오히려 양 측의 관계가 더욱 꼬여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한은 총재 인사가 순조로운 정권 이양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이번 한은 총재 인사에 대해 윤 당선인 측과 소통했다는 점에서 ‘화해 제스처’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에서도 ‘윤 당선인과의 회동’을 언제든지 조건 없이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날 인선을 통해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회동의 ‘손짓’을 한 만큼 신·구 권력 사이에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도 조금씩 풀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의 반응은 냉랭하다. 청와대의 인사 발표가 나오자마자 “한은총재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번 인선이 청와대의 결정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측이 인사권을 두고 대립했던 자리(감사위원 감사위원 2석, 한국은행 총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가운데 한국은행 총재는 그나마 전선이 첨예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견 차가 가장 큰 감사위원 인선의 경우 청와대가 어떻게 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로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서 향후 대치 국면 해결책 모색 역시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정권 이양 상황이 계속 꼬이고 있는 것과 관련,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 당선인 측에서는 청와대가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승인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상황에서 회동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반응이다. 청와대가 정권 이양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협력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신·구 권력의 갈등이 ‘서막’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회동을 통해 ‘정치적 해결’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추후 인수위의 중요 결정 사항마다 청와대와 인수위 사이에서, 또 여야 사이에서 충돌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첫 국무총리 지명이 이뤄진다면 청문 정권이 본격화하며 여야 간 대결이 격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윤 당선인의 취임직 직전까지 신·구 정권의 대치가 풀리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민주 광주시·전남도당, 공심위 구성 내주부터 본격 공천심사

시장 공심위원장에 김종구 교수

도당 정병석 전남대 전 총장 선임

6·1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지역 출마예정자들이 붓물을 이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과 전남도당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6·1 지방선거 공천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당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당 대회의실에서 제8차 상무위원회의를 열고 공관위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김종구 조선대학교 법대 교수가 선임됐다. 각계 인사 13명으로 구성된 광주시장 공관위

는 외부인사 42%, 여성 50%, 청년 25%의 비중으로 짜였다. 이는 민주당 중앙당의 공관위 구성 기준인 외부인사 30%, 여성 50%, 청년 10%를 웃도는 비중이다. 이번 공관위는 비례대표 공관위 활동도 겸임한다.

광주시당은 이날 상무위를 통해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도 구성했다. 재심위원장은 김정우 변호사가 선임됐고, 위원도 50%가 여성으로 구성됐다.

전남도당은 정병석 전 전남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공관위 구성을 마치고 24일 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천 작업에 본격 나선다.

공관위원은 정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여성 50%, 외부 인사 30%, 청년 10% 이상이라는 당 지침을 준수했다고 도당은 밝혔다. 재심위원장은 도당 윤리심판위원장을 지낸 박준수씨로 정해졌다.

민주당 광주시장과 전남도당은 “투명성을 높인 이번 공관위 구성을 통해 제8회 지방선거에서 광주 시민들의 민의를 바탕으로 하는 유능한 후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과 전남도당에 공천을 신청한 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는 1000여명에 달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광주는 광주시장 1명, 구청장 5명, 시의원 23명, 구의원 68명(비례 포함)을 선출한다. 전남의 경우 전남지사 1명, 시장·군수 22명, 도의원 58명, 시·군의원 243명을 뽑는다.

민주당 광주시장과 전남도당은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한다. 시장·지사 공천권은 중앙당에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http://www.greenfuneral.kr/

光州市民의 장례식장은, 그린장례문화원!

보내는 이의 효심과 그리움으로 다시찾는, 장의 名家

광주시청에서 10분, 용전사거리에 있습니다.

사전상담하시면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린장례식장 임소문 6선!

- 호남·88·남해C 진출구 전국 어디든 사통팔달
- 동시 주차 1천대 분관 일체형 주차타워
- 동시 협대 350명 장군 등 VIP전 객실 13개소 완비
- 가격은 저렴하고 품격은 최고의 고감도 의전서비스
- 세계김치문화축제 대통령상 수상 음식 맛 최고
- 창업주 아너소사이터 정희원 국민나눔대상 수상

상담문의 250-4455

광주광역시 하서로 663길 97(용전동 1213-17)

봄에 떠나는 그리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매주 금,토,일 광주출발 셔틀버스 운행

당일투어 1인 139,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199,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062-385-0515 아이티여행사:062-382-8866